



[www.peaceone.org](http://www.peaceone.org)

#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8년 6월

Vol.176

## 정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정세 전망

## 현장

6.9 평화촛불 / 효순미선 추모제

## 현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략 전면 수정해야!

## 회원마당 / 지역소식

2018년 6월 통권 176호

# 평화누리 통일누리

역사상 처음,  
북미정상이 손잡은 날  
출처 : 연합뉴스, 경향신문



- 01 **정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의 의미와  
향후 정세 전망 + 고영대
- 



- 16 **자료**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 18 **평화촛불** + 서종환, 정수미, 도경임
- 



- 21 **회원마당** 새벽 + 조창익
- 

- 22 **현장** 효순미선 16주기 추모행사 + 김민성 조아진
- 

- 25 **회원마당**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와서 + 이기훈
- 



- 28 **사진에세이** 한발짝만 움직여도 + 김성환
- 

- 30 **현안** 방위비 분담금 대폭 늘리라' 는 미국...  
정부는 협상전략 전면 수정해야! + 윤승하
- 



- 34 **소식** 광주 / 군산 / 나주 / 대구 / 보령 / 순천 / 부산 / 부천 / 서울 / 익산  
/ 인천 / 전주
- 

- 40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5월)



##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정세 전망

고영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6월 12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가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하 ‘싱가포르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취소, 북의 개최 요구, 전격적인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정상회담 되살리기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었다. 적대와 불신으로 점철된 북미관계의 현 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은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북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의미를 지니며, 그 성과물인 ‘싱가포르 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성명’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포괄적 합의’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성명’의 의미와 ‘포괄적 합의’에 그친 원인과 후속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축으로 전개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본다.

## ‘싱가포르 성명’의 의미

6·12 ‘싱가포르 성명’은 70년 만에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성명’은 무엇보다도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 병행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함의를 지닌 합의로, 이후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북미 간 ‘구체적인 합의’ 도출과 그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 주고 있다.

6·12 ‘싱가포르 성명’은 전문에서 또한 양국 정상이 “호상(상호) 신뢰 구축이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북핵의 신고와 사찰,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한 난관들을 양국 정상의 신뢰에 기초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특히 양국 간 핵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관련해서도 관료적,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양국 간 신뢰를 쌓아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싱가포르 성명’은 다음으로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0년 넘게 적대적 대결과 만성적인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자주통일을 위한 전제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 성명’은 다음으로 2항에서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한편,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된다. 이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싱가포르 성명’은 다음으로 3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와 언론들의 계속되는 북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상 간 합의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동

안 북은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핵 보유 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 왔다. 이제 미국이, 그것도 정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체제 안전을 보장한 만큼 북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과 그 이행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다.

'싱가포르 성명'은 다음으로 4항에서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전쟁 포로(POA)와 실종자(MIA)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과 송환은 '싱가포르 성명'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북미 간 "상호 신뢰 형성"의 일환이자, 미·베트남 수교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인들의 대북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성명'은 다음으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의 해당 고위 인사 사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 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 동시 병행으로 이행해 가는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포괄적 합의'에 그친 '싱가포르 성명'을 '구체적 합의'로 발전시키고 이행해 가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싱가포르 성명'은 70년 동안의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실로 담대한 북미 정상 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 전망은?

그렇다면 북미 정상은 과연 후속 협의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 어갈 수 있을까? 일단 그 전망은 밝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양 정상 간 강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의지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대해 '진심어린(heartfelt) 대화'였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귀국 후(6. 15)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과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회담의 첫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를 가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며 과거의 불신을 씻어내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며, 귀국하자마자 제3차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유해 송환에 나서는 등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위한 조건 확보와 그 이행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에 상호 신뢰 쌓기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신과 대결, 전쟁위기로 접어들어 왔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을 변경하여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경제발전으로 번영을 도모하려는 북의 절실한 전략적 이해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과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이를 앞세워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을 도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들이 내놓았던 예상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CVID나 비핵화 방법론이 빠졌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성명'을 비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북미수교 등의 구체적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성명'에 대해 실망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성명'을 일부 전문가나 언론의 평가처럼 북이 미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둔 회담이나 성명으로 단정 지으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포괄적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북미가 모두 윈·윈 한 회담이요, 성명이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은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제공을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북미 모두 다 실패한 회담이요, 성명이다. 북은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 등 체제 안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상회담이나 '싱가포르 성명'이 어느 한 쪽이 승리했다거나 실패했다고 규정짓는 것은 일면적이고 성급한 평가다. 사실 CVID라는 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만을 기준 삼아 '싱가포르 성명'을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또한 '싱가포르 성명'이 고위급 후속 협상을 진행하여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승능 찾는 격의 성급한 주장이다. 이 역시 '일괄타결'을 기대했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성명'이 비핵화 및 체제 안전 보장의 방법론까지 담지 못했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의 승리나 패배로 규정하는 것은 편향된 사고로 이후 후속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에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비핵화 수준, 방법론, 시한 등에서의 북미 간 합의 수준과 이에 상응해 미국이 북에 제공하고자 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북미수교 등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합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북미정상회담 후속 회담의 합의 지점과 성패 여부를 좀 더 상세히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북미정상회담 이전의 의제별 합의 수준

김정은 위원장은 다렌 북중정상회담(5. 7~8)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승전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5. 16)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을 패전국 취급하는 미국의 ‘PVID’ 또는 ‘CVID’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평양 방문(5. 9)을 전후해 북미 간에 큰 틀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일보(5. 10)는 “북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받아 합의문에 명기하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는 타협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JTBC(5. 10)도 “최근까지 한미 관계자들이 만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촘촘히 검토하고 조율을 마쳤”으며, “폼페이오는 조율된 안을 북한에 제시했는데 북한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는 <노동신문>(5. 10)의 보도로 이어진 것이라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아예 깨버리려는(CNN, 6. 6) 볼턴 보좌관의 ABC 뉴스 인터뷰(5. 13)와 카다피의 최후를 연상시키는 펜스 부통령의 폭스 뉴스 인터뷰(5. 21)에 북이 김계관 부상(5. 16)과 최선희 부상(5. 24)을 내세워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반발하는 극한 대치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보내기 직전 가진 폭스 뉴스 인터뷰(5. 24)에서 “물리적으로 단계적 방식이 조금 필요할지 모른다.”며 북의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일부 수용(이른바 ‘신속한 단계론, a rapid phase-in’)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북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는 김계관 부상의 담화(5. 24)를 통해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며 비핵화 방법론에서 ‘트럼프 방식’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6차례)과 싱가포르(3차례)에서 총 9차례의 실무회담을 열어 막판까지, 그것도 심야회담까지 열어, 정상회담의 의제를 협상하였고, 폼페이오 장관도 정상회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에 CVID의 수용을 촉구했으나 북미 정상은 끝내 공동성명에 CVID를 명기하지 못했으며,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및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볼 때 북미정상회담 전 북미가 CVID, 비핵화 방법론, 시한에 합의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는 미국의 희망을 담은 성급한 보도에 불과했으며, 소위 트럼프 방식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김계관 담화(5. 24)도 현실과 다른 북한의 희망을 담았을 뿐이었다.

## 2)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 수준에 대한 전망

조만간 재개될 후속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CVID, 방법론, 시한 등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조약, 북미수교 등의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배열에서 과연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상황은 낙관과 비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먼저 CVID에 대한 북미 간 현 평행선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CVID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6. 15)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한 중 가진 기자회견(6. 14)에서 CVID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반면에 북은 노동신문(6. 17)에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경제적 우세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와 민족은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CVID 요구를 패전국

취급, 곧 주권과 자주성의 침해로 받아들이는 북으로서 CVID를 결코 명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CVID와 관련해서는 향후 후속 협상에서도 북미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 기자회견(6. 14)에서 주장한 것처럼 '싱가포르 성명'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가 곧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문정인 특보도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JTBC, 6. 12)으며,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아시아경제, 6. 20)라며 양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CVID는 ... 북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항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용어 사용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볼턴이) CVID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까지 전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핵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뤄질 수 없는 요구”라면서 “북한에게 트집을 잡아 최종적으로 굴복시키려는 것”(고별뉴스, 6. 13)이라고 미국의 대북 CVID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 전 장관도 한편으로 “complete라는 말 속에 이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C 속에 V와 I가 다 들어가 있다.”(시사저키, 6. 13)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문 특보도 정 전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개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다소 혼란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준형 교수는 CVID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베를린 구상’ 1주년 행사(독일)에서 “CVID에 대한 집착은 북한을 철저히 항복시키기 위한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음모로, 주권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다.”(연합뉴스, 6. 16)며 ‘싱가포르 성명’의 ‘완전한 비핵화’와 CVID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6. 14)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의 CVID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은 현실적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 ‘I’는 북한의 반발이 타당하므로 빠지는 것이 맞다. … 또 검증을 말하는 ‘V’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는 효용성이 반감됐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까지는 검증만으로도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었으나, 핵을 완성한 후에는 검증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자발적 신고와 폐기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달리 문 특보나 정 전 장관처럼 양 용어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북이 자신들을 패전국 취급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CVID를, 곧 ‘완전한 비핵화’를 스스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에 담았다는 주장이 된다.

여기서 통일연구원의 현안분석팀이 제시한 CVID 개념과 해법은 눈여겨볼 만하다. “CVID는 핵 폐기 및 검증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무제한성과 강제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북한에 제공되어야 할 ‘불가역적’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CVID와 같은 어찌면 비현실적 개념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후 후속 협상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 검증의 완결 여부나 가역성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사실상 CVID 실현)될 수도 있다.”(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평가, 6. 14)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 현안분석팀의 CVID 개념은 핵 폐기 및 검증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무제한성과 강제성, 곧 사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CVID 문제점의 가장 본질적 측면을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나 2008년 6자회담 막바지에 사찰과 검증 문제를 논의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CVID를 앞세워 군사 시설을 포함한 북의 모든 장소에 대한 불시 사찰을 요

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보도(5. 10)에 따르면 미국은 “(북)핵 기술자 수천 명을 해외로 이주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북이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며, 이런 미국의 요구는 IAEA 특별사찰 수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주권 침해적 요구다. IAEA 사찰은, 그것이 특별사찰이라고 해도, 사전 합의된 시설과 일정에 따라 사찰을 한다.

그러나 현안분석팀은 CVID 문제점과 그 비현실성을 정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향후 이행 과정에서는 사실상 CVID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CVID가 비현실적이라면 이행 과정에서 CVID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안분석팀 주장대로 이행 과정에서 “사실상 CVID가 실현”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이 CVID를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북이 CVID를 수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북미가 CVID 개념과 이행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CVID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 주류 사회와 언론의 반발을 감수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조약이나 협정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북미정상회담 직전(6. 4)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 해제 5대 조건을 제시(주간조선 6. 18)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소와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사찰”이다. “장소와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사찰”이란 바로 사찰의 강제성과 무제한성, 그리고 불법성까지 내포하는 요구다.

이렇듯 CVID는 그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 군사적 위협으로, 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으로서도 CVID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에 북미가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CVID에 대한 타협과 절충은 필연이다. 곧 CVID 개념과 범주, 비핵화 검증의 완결성, 특히 불가역성 확보 방안을 타협, 절충해야 한다.

그래서 CVID의 해법은 북미가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고 그에 맞춰 북이 CVID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성명’ 전문의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표현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은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사후 실무접촉에서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CVID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이행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자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높게 취해져 북의 대미 신뢰가 높게 쌓이면 쌓일수록 북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CVID 요구에 접근할 것이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 만큼 CVID라는 것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호 신뢰에 기초한 정치적 판단과 의지에 달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미가 타협 가능한 지점은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미국은 암묵적으로 북의 주권을 존중하고 합법적 방식으로 검증의 완결성과

불가역성을 보장 받는 방안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끝내 비핵화 검증과 불가역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북미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북은 일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은닉하는데 성공해 다시 핵 개발과 핵무장, 핵대결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외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북은 북대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무차별적인 선제무력공격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경우든 현상변경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북은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라는 오랜 숙원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CVID 해법도 한층 더 주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로 회귀할 조건과 가능성이 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대립 지점의 하나였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특히 정상회담 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 미국은 ‘일괄타결’ 또는 이를 변형한 ‘트럼프 방식’, 곧 ‘신속한 단계론(rapid phase-in)’을 주장해 왔으며, 북은 일관되게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싱가포르 성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전문에서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실현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의 비핵화가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던 보좌관이 주장해 오던 ‘일괄타결’ 방식을 뒤로 하고 ‘신속한 단계론(rapid phase-in)’에 대해서도 보다 신축적이고 현실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는 분명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와 이행을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를 시작하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 과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릴 수 있는 만큼 제가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15년이 걸리는데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20%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불가역적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은 특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불가역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라는 입장을 밝혔다. 곧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과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북미정상회담을 보도(6. 13)하면서 “조미 수뇌 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시었다”며 북미 정상이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시간과 방식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북미 간 후속 협상은 보다 신축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후속 합의 도출과 이행 가능성이 커졌다.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이전부터 북미가 가장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한 중 기자회견(6.14) 중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2년 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최초로 비핵화 시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발언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이해가 계산된 발언이지만 북쪽에서도 트럼프 정권이 바뀔 경우 ‘싱가포르 성명’ 등 트럼프 대통령과 쌓아 올린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6개월 안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기본 틀을 정초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을 만나보면 북한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협상) 상대가 바뀌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끝낸다는 게 그들 생각으로 보인다.”는 김준형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도 폼페이오가 제시한 2년 6개월이라는 비핵화 시한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다만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핵 국가들의 비핵화 선례를 볼 때 북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핵무기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남아공과 리비아조차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만큼 이 기간에 한반도 비핵화가 물리적,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꼭 북의 핵능력에 대한 시한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15년의 비핵화 기간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를 시작하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20%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불가역적인 것이죠.”라고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의 임기 안에 불가역적인 수준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폼페이오가 제시한 2년 6개월의 시한보다 훨씬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한에 대한 입장을 따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N과 인터뷰(6.25)에서 “2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것에 대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북미 정상들이 제시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 지난 14일에 언급한 2년 6개월의 비핵화 시한을 뒤집었다. 이는 북미 간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시한과 타임 테이블 의제와 관련하여 한층 융통성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북미가 후속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CVID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길은 첫째도 둘째도 북미 사이에 쌓인 신뢰로부터 열린다고 할 수 있다.

##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와 주한미군의 장래는?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 불투명했던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분명한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동안 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거론했던 북의 주한미군 문제 우회설이 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중앙일보(6. 3)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했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다수 국내 언론의 보도 논조도 이와 유사하며, 이는 “한미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으로 촉발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북의 주한미군 문제 우회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국내외 보수수구언론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였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던 사안”이며 “(매티스 장관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



언(뉴스1, 6. 13)으로 볼 때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발언이 아니었으며, 한미 국방장관들이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6. 19)함으로써 조기 이행에 들어갔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북 이하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이자 북의 신속한 후속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뉴욕이나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엔진 실험과 발사가 이루어진 평북 동창리 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귀국 직후 가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6. 13)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

단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는 역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채 일면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조절”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1990년, 1992년의 중단 사례와는 달리 북미 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와 관련해서도 “미래 협상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한미군 전면 철수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강조하듯이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미정상회담과 사전 실무 접촉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다루어졌고 후속 협상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4. 28)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5. 5)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4. 17~18)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아베 총리의 의견을 구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서 거래 재료로 삼을 생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가 이미 논의되었고,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법적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 후 한 모임(6. 19)에서 “한미동맹 문제는 북미조약에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항목을,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4. 30)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반대의 논지를 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 특보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반하며, 따라서 무책임하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의 근본정신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과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데 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승하면 그동안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해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대중 포위를 주된 임무로 하는 존재로 그 성

격이 전면화되고 한반도는 드러내 놓고 그 전진기지로 전략하게 된다. 한반도 냉전체제가 동북아 차원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통령 특보가 냉전적 사고에 젖어 한편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통일 후 한미동맹 존속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왜 북이 결정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한미 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 주한미군 철수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통일 이후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 당국이 늦어도 통일 초기에 한국의 국민, 곧 민족 전체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 통일 과정의 남북 당국과 국민들이 또한 통일 한국과 통일 한국의 국민들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전략하는 것을 용인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정인 특보는 같은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가 오면 미국 내에서부터 (주한미군 유지) 문제 제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바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상실되는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을 요구하고 허용한 한국 당국과 한국민이 주체적으로 주한미군을 내보내야지 왜 미국인들의 철수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미 당국과 미국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철두철미 비주체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미 당국과 미국인들이 계속 주둔을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미군 주둔을 허용하겠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문 특보는 통일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영토, 사법 등 국가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군 주둔으로 통일 한국이 중국 등 주변국과 대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분단의 장본인 미국이 통일 과정과 이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족의 지상명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ABC 뉴스와의 인터뷰(6. 12)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북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싱가포르 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북의 비핵화로 축소해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은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1994)나 ‘9·19 공동성명’(2005)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 북에 제공했던 소극적 안전보장(NSA)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핵우산 제거는 한반도 비핵

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다. 미국의 핵우산을 그대로 둔 채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남에 핵우산이 계속 제공되는 한 비핵화 협상이 완결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새로운 평화의 시대, 평화·진보진영의 과제와 평화촛불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성명’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머리말에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와 성명의 채택 의미를 같이 했다.

정상회담 후 북미가 후속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유해 송환 등 ‘싱가포르 성명’은 이미 이행에 들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성명’의 부속 합의나 구두 합의 등 이면 합의가 있다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장 폐기 등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며, 이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속 합의 체결로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북미 간 협상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들이 싱가포르 회담과 성명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만큼... 양 정상이 평양과 워싱턴을 교차 방문하고 그때마다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른다면 ‘싱가포르 성명’은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미 간 후속 합의가 성공적으로 도출되고 이행되어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양 정상이 언급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중대한, 진정한 변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것은 ‘싱가포르 성명’이 천명하고 있듯이 한 마디로 한반도와 동북아가 적대적 대결과 전쟁위기, 전쟁 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중대한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데 있다.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로 남북, 북미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잔재가 청산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뿌리내려감에 따라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철수가 불가피하며, 냉전의 산물인 한미동맹도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대결과 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난 남북과 (비동맹중립국으로서의) 통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이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안보를 도모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가 대체하게 된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몽고의 비핵화와 더불어 동북아 비핵지대를 전인하여



핵 없는 세상의 마지막 교두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획기적인 증대와 북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북의 5개 경제특구, 22개 중앙·지방 개발구 등에 남한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남북 경제의 통합력이 커지고 민족경제공동체가 건설되어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또한 남북 군축과 국방예산 삭감을 가져와 경제발전과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0·4 선언과 이 이행 합의서(2007. 11. 16)와 이를 반영한 ‘판문점 선언’에 토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구상’은 3 경제벨트—환서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비무장지대) 경제벨트—를 조성하여 남북 경제의 통합과 민족경제공동체 구축을 도모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경제공동체 건설로 자주와 민족대단결이 고양되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실현된다. 민족통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킨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통일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 평화↔번영↔통일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 건설로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이는 다시 대륙 횡단 철도(TSR, TCR)와 연결되며 남북리, 남북중 가스관, 송유관도 건설되어 민족경제가 만주, 극동, 시베리아,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게 된다. 중국의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선도구 전략, 신동북진흥전략, 일대일로(육상·해상·빙상 실크로드) 전략과 만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2013. 10. 18)와도 연계되어 민족경제의 무대가 획기적으로 확장된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가 개최한 동방경제포럼(2017. 9)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9-Bridge 협력 사업’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과의 접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숙원과 꿈은 북미, 남북 간 핵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의 성실한 이행으로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은 끊임없이 핵대결을 추구하고 그 내용을 불신하고 이행을 비판하는 국내외의 수많은 세력들의 발호 때문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지금도 불투명하다. 자주·평화춧불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 북미 합의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기필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연 또 하나의 역사적 쾌거로 온 겨레와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 병행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포괄적 합의’로서, 이후 북미 간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과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 주는 관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70년 넘게 적대적 대결과 만성적인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2항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한편,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된다. 이에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실현 원칙에 따라 이제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조응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언으로,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던 사안”이며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뉴스1, 6. 13)으로 미루어볼 때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북의 신속한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협상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분명 주한미군 전원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강조하듯이 단지 비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6·12 ‘공동성명’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3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북은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두었으며, 핵 보유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것도 정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대북 군사적 위협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시사하면서 북의 비핵화 과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의 비핵화가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음을 밝히면서 불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뒤로하고 이른바 ‘신속한 단계론(rapid phased-in)’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북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CVID의 명시적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전쟁 포로(POA)와 실종자(MIA)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자 미·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보듯이 북미 수교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 실로 담대한 결단을 내린 세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전면 이행되어 한반도에서 기필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힘과 평화 촛불을 일궈 나갈 것이다. (2018. 6. 12) 



# 종전, 평화협정, 자주통일 외친 6.9 평화촛불!

사진 : 서종환, 정수미





# 평화가 오는데 왜 사드는 우리 마을에 계속 있나요?

소성리 도경임 할머니가 6.9 평화촛불에서 읽은 편지

한반도에 평화정세가 왔다고 하대요.

텔레비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도 만난다고 합니다. 어딜가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기대하면서 활짝 웃기도 하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고 예쁜 마을 소성리에 살고 있는 도경임 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제가 살고 있는 소성리에 사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전쟁무기가 들어왔어요.

사드라는 생소한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 제가 살고 있는 소성리는 이제 작고 예쁜 평화로운 마을이 아닌 전쟁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는 지금도 수백 명의 경찰들이 밤낮없이 마을 안에 머무르며 아침 저녁으로 사드기지 공사 차량을 드나들게 한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 마을 소성리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긴장이 팽팽할 뿐입니다.

소성리로 시집온 후, 수십년 쯤 봄이면 평화로이 나물 뜯으며 다니던 그 곳을 이제는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하루하루 군인들과 경찰들의 감시 속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를 해친다는 사드는 여전히 우리 마을 뒷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고, 새벽부터 경찰버

스의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는데, 부대가 들어선 산자락은 깜깜한 새벽을 도시처럼 환하게 밝혀 그 많던 별빛조차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사드 기지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공사를 막기 위해 차가운 길 위에 앉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늙어 불법공사를 위해 드나드는 공사차량을 막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드는 우리 마을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

사드 배치는 불법이고, 기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도 불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아들딸과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사드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드를 뽑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딸과 손주들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가 뽑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며 지금까지 온 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져도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소성리에서 사드가 뽑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늙고 고단한 소성리 할매들을 도와주세요.

불법 공사 당장 중단시키고, 불법으로 소성리에 갖다놓은 사드도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사드 없는 평화로운 소성리 마을에서 나물도 뜯고, 농사도 지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매들이 사드 기지 정문 앞에서 매일 외치는 구호를 함께 외쳐주세요.

사드 빼! 미군 빼! 경찰 빼! 



# 새벽

조창익 목포, 전교조 위원장

나의 새벽은 오롯이 한상균 것이었다  
 이불을 정돈하고 염주를 손에 들고  
 내 님 만나듯이 108배로  
 그가 간힌 옥방을 섬겼다  
 신타래처럼 엮히고 설킨  
 사념이  
 물려오는 길목에  
 그가 장승처럼 서 있었다  
 지리산 장터목  
 만고풍상 견뎌온  
 설해목처럼 떠억 버티고 서 있었다  
 너른 능선  
 지천으로 가난한 들꽃들이  
 바람결에 일렁이다가  
 이내 촛불로 번져갔다  
 그의 우렁한  
 광장의 포효가  
 세상을 흔들어 댈 때  
 우듬지 파르르  
 칼끝 혁명이  
 적들의 정수리를 겨누었다  
 그가 없는 광장에서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가 없는 무수한 깃발 사이사이  
 그의 햇살 같은 미소를 보았고  
 선량한 행진 대열 속 함께 걷는  
 신록같은 발자국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음이라  
 진득한 잉겔볼로  
 시뻘건 활화산으로  
 훌쩍 날아오신  
 오월  
 혁명의 계절에

우리  
 그대  
 펄떡이는 한상균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노니  
 시대의 질곡을  
 천부의 낭만으로 넘어서는  
 품 너른 내 님이어  
 아!  
 아직도 노동은 어둠의 시대  
 아직도 노동은 자본탐욕의  
 개머리판으로  
 짓이겨지는 땅  
 어찌 감히  
 봄을 노래할 수 있으랴  
 어찌 저ীদের 천년왕국을  
 용서할 수 있으랴  
 아직도 우리는 저 깊은  
 농단의 강물을 건너야하노니  
 아직도 우리는  
 협잡과 야합과 배신의  
 깊고도 깊은 저 강물 위를  
 건너야하노니  
 동지여!  
 계급전쟁의 꼬트머리  
 통일변혁의 한 복판  
 다시  
 들숨에다 사랑을 담고  
 날숨마다 혁명을 담자  
 나의 새벽  
 우리의 신새벽  
 한상균 동지여! 동지여!



2018. 5. 31. 목포 회원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환영하며 낭독한 시.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과 삼천배 투쟁을 한상균 동지가 좁은 감방에서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너무 고마워 새벽마다 한상균을 위해 108배를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조창익 위원장은 6월 18일부터 다시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 효순미선 16주기 추모제

– 추모공원 설계도 공개, #SoSorry2002 운동 시작



2002년 미군장갑차에 압사당한 두 여중생, 효순미선 16번째 추모행사가 양주 사고현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의 힘으로 추모비를 만들고, 추모비를 세울 평화공원 부지까지 사고 현장에 마련한 가운데,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2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추모공원 설계도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마련한 설계안대로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미 2사단이 세운 추모비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에 평통사와 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미군추모비를 2사단 내로 이전해줄 것을 미 대사관과 미군 측에 여러차례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이전 및 철거(removal)는 한국 정부와 소유권자들(property owner)이 결정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좋게 생각해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고, 대놓고 무책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올해 추모 평화공원 조성을 완료하려는 계획은 연기가 되었다.

한편, 효순미선 추모평화공원 구성에 앞장서고 있는 작가들은 두 여중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 아니라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자는 다짐을 모아내고 공원 조성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 #SoSorry2002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다. 추모행사에는 평통사 회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작가, 종교인들이 폭넓게 참여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효순이, 미선이와 또래인 민성 학생이 참여하여 편지글을 낭독하며,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에 김민성 학생의 편지글 일부와 페이스북에서 #SoSorry2002 릴레이운동을 시작한 조아진 작가의 글(<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865750440153693>)을 인용해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16년 전 나의 친구, 효순 미션이에게

그날 너희가 걸어가던 좁은 길로 미군의 장갑차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미군의 장갑차가 너희들이 길 위에 있다는 맞은 편이 수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미군의 장갑차가 멈추고 너희들은 친구를 만나서 생일파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민성 김천 울곡중학교

16년 전 나의 두 친구 효순 미션아.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것을 보았니? 미군의 범죄를 알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며 호소했는데, 그것을 들었니?

그런데도 미군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어.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고 결국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니 미군들은 비겁해. 나는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의 두 여학생을 죽이고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억울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의는 어디로 갔을까?

내가 사는 김천과 가까운 소성리에도 미군이 들어와 있어. 엄마의 말로는 150명쯤 된대. 그 미군들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드 기지를 만들고 있어서 엄마는 매일 저녁이면 촛불을 들고 사드 반대 싸움을 하고 있어. 사드는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무기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미군기지가 무기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하지만 아직은 그다지 실감이 나지는 않아. 엄마는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내가 사는 김천이 위험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얼마전 엄마를 따라 일본과 오키나와에 다녀왔어. 거기에도 미군기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 미군에 의한 범죄로 오키나와도 힘들어하고 있었어. 1945년에 오키나와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터가 돼서 20만명이 죽었던 역사도 있어. 그런데 아직도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

효순아 미션아, 이제부터 나도 너희들을 기억할게. 나는 살아있는 효순, 미션이가 되어서 6월 13일이 되면 너희들을 만나러 올게. 



이진석, 최정민, 조아진, 박비나 작가가 참여한 추모웹툰(왼쪽) #SoSorry2002 운동을 설명하는 김운성 등 작가들(아래)




## Remember 2002.6.13. #SoSorry2002

2014년 4월 16일. 만화나 그림과는 거의 담 쌓고 지내고 회사 일에만 열중 하던 중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무언가 무섭고 아픈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계속 두근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깊이 좌절했었다. 그때 대학교 때 은사셨던 고정일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 슬픔에 찬 분노의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고 함께 걸개그림을 그리고 캐리커처를 그렸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광장에 나가며 모호했던 마음의 불편함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6월 13일. 좀 쉬엄쉬엄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있던 차에 김운성 선생님께서 효순이미션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연락을 주셨다. 해야 하나 모르چه 할까 고민하던 중에 최정민 작가가 바람까지 넣어서 또다시 함께 하게 된 효순이와 미선이를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을 만드는 평화공원 사업. 오정요 선생님의 글에 그림을 그려 웹툰 한편을 만들었다. 비웠던 그릇에 다시 수많은 감정과 고민이 담겨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또 그 작은 그릇은 차버렸다.

2018년 6월 13일. 공원부지는 마련이 되었지만 건축을 할 비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또 16주기에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몇 번의 실무회의와 작가회의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생각의 다름이 부딪히다 다시 섞여 들어감에 놀라기도 난감해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모든 것에 동의하거나 인정 할 순 없어도, 방향이 다르더라도 목표는 같았기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SoSorry2002 운동을 시작한다.

#SoSorry2002 운동은 개인 SNS를 통해 짤막하게 왜 효순이와 미선이에게 미안한지에 대한 마음을 밝히고 잊지 않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2018년 6월 14일 조아진) 

#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와서

이기훈 청년 회원

지난 5월 11일,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왔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나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린 토론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방부에 대한 나의 개혁의지(?)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발단은 지난 4월이었다. 우연히 국방부에서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참가자격은 ‘국방분야(예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워크숍에서 ‘국방개혁(예산)’을 당차게 발표했던 열혈청년이 아닌가!(정난 반 진심 반). 그래서 국방예산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큰 목표를 안고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4월 18일, 국민참여단이 발표되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살펴보니 내 이름이 있었다. 동명이인은 아닌지 나이와 휴대폰 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사람마다 부여된 번호를 보고 추측하건데 아마 경쟁률이 3:1 정도 되었던 것 같다. 아마 내가 뽑힐 수 있던 이유는 ‘지방에 사는 20대’라는 이점 덕분이 아닐까? 아무튼 그렇게 뽑히고 나서 전화 설문도 하고 사전 교육도 받으면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드디어 토론회 당일이었다. 국방부는 토론회 결과를 내년도 국방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몇 번이나 호언장담 했고 내 기대는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들뜬 발걸음으로 토론회장을 향하며 상상해 보았다.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에 부합하는 군대, 국방개혁의 방향, 국방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데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방위력개선투자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라며 논의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전력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었고(국방비는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투자로 나뉜다) ‘국민참여단’은 그저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달라”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방부의 내부 논의를 거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했는데 제안된 사업들의 이름을 보면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성격,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전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 ‘예비군 피복지원’, ‘병 휴가시 교통비 지원 확대’. 나는 이런



논의가 의미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던 국방부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왜곡된 ‘안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방정책, 국방예산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으로 간주되었고 모든 질문과 문제 제기는 철저히 차단되어왔다. 부끄러운 기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끈질긴 ‘공부와 실천’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그렇기에 새 시대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라면, 국방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국방예산의 목표와 책정기준, 발전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송영무 장관의 개회사였다. (원래 송영무장관은 원탁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회사하고 사진만 잔뜩 찍고 가버렸다)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세 가지만 지적해본다.

첫째, “세계 10위권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내년에 50조원(2018년 43조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겠다”(송영무 장관)

국방비는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이 되면 주변국의 경계심(군비경쟁)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

또 이미 한국의 국방예산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16국방백서>를 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국방비는 약 73만원(2016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국방비가 많은 일본(약 35만원), 중국(약 11만원), 러시아(약 39만원), 독일(약 49만원)보다 많다.

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력 감축과 예산 삭감을 통한 군대의 ‘정예화’이다. 따라서 50조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은 국방개혁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는 ……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송영무 장관)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이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3축 체계는 북한이 공격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또 ‘상호불가침’과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판문점선언,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같은 북한의 실천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더욱이 남북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군사적 신뢰구축) 실제로 병력과 군비를 줄이기로(군축) 합의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가며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견 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도 아깝다.

셋째, “이 시기(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3년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

이게 정녕 판문점에 다녀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4월 27일 똑똑히 보았던, 김정은 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술을 받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판문점 선언은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시대와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국방부 장관을 보고 있으면 하루빨리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문민화)는 것을 몇번이고 되뇌고는 한다.

그리고 저 발언 뒤편에는 군사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을 운운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절망감까지 느끼게 한다.

헌법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주권 수호를 위한 권리로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는데 이 군통수권의 핵심이자 요체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군사 주권 나아가 국가 주권의 제약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지 조건을 운운할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토론회는 그리 유익하지 못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토론회 모집공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방분야(예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다.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다. 우리도 시대에 걸맞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인 ‘국방분야(예산)’에 조금 더 자주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자.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방분야(예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서 아니,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사말만 하고 금방 자리를 뒀다. (사진:뉴스1)



# 한발짝만 움직여도

김성한 노동모임

한발짝만 움직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있고,  
일촉즉발의 순간이 있다.

모든 정신과 모든 힘이 한곳에 집중된 긴박감과 최고조의  
긴장감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찰나.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관조할 수 있게 되었다.  
긴장감은 편안함으로  
긴박감은 따뜻함으로  
변해갈 것이다

메말랐던 강에는 물이 흐르고,  
황폐해진 산에는 푸른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며,  
어두웠던 밤은 환희 빛날 것이다.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 흐르고  
평화의 강이 흐르고  
평화의 기차가 달릴 것이다.

대결과 반목의 역사는 거대한  
황소 조각처럼 박재되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 길에 우리가 다시 서 있다.  
평화의 길 위에.

# 방위비 분담금 대폭 늘리라' 는 미국... 정부는 협상전략 전면 수정해야!

윤승하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삭감 목표로 협상전략 수정해야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런데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목표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중대한 요인이 생겼다.

첫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이 최근 국방부 발표로 무려 5.5조원(2015년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전에 1.6조원(2010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현재 규모(2018년 기준 9602억 원)의 적정성과 지급 자체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등 관문점 선언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19일 한미 군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다. 심지어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실제 부담액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3~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미국보다 5배나 많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지난 5월 24일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2015년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직접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해 美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154억 원), 카투사 병력지원(98억 원), 미 태평양 공군탄약(MAGNUM) 탄약고 정비(81억 원), 부동산 지원(82억 원), 기지

---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글입니다. - 편집자주



주변도로사업·평택지원(1조4542억 원), 미군기지이전비(7169억 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1조3442억 원) 등 4조4974억 원이다. 간접 지원을 보면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7105억 원), 카투사 기회비용(936억 원), 훈련장 사용지원(236억 원), 세금 및 공공요금 등 면제·감면 비용(1312억 원) 등 9589억 원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총액은 5조4563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의 국방예산에서 지출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비인적주둔비)는 1조526억 원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5배나 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는 미군 주둔에 따른 우리 국민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미소파 5조에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춰본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5배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공평 그 자체인 것이다.

##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을 축소·왜곡한 국방부



지난 5월 2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2010년에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집계한 자료가 축소·왜곡된 것임이 드러난다. 2010년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원액을 1조 6749억 원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0년 집계 때는 2015년과 비교할 때 미군기지 이전비(직접 지원), 美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비(직접 지원),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비(직접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직접 지원), 공무집

행피해배상(직접 지원), 훈련장 사용지원(간접 지원) 등 6개 항목을 누락하고 계산하였다. 또 한국군이 미군 탄약(미 육군 14.5만톤 및 공군 탄약 3.4만톤)을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누락하였다. 2010년 미군기지이전비만 해도 6967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누락된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계산했다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국방부 발표보다 2~3배는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축소·왜곡된 집계조차도 미국을 의식해 2010년 이후 집계를 중단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자(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간접 지원은 인정하지 않고 직접 지원도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해서 정부 스스로 집계를 중단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비를 축소·왜곡하고 그마저 집계를 중단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발휘해야 할 대미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을 왜 축소·누락해 집계했는지 또 왜 그마저 집계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 토지임대료 등을 여전히 저평가 하는 국방부 집계의 한계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집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국방부 집계는 첫째,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상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미군 전용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기타공여지는 공시지가의 2.5%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현격히 낮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임대료 평가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임대료 평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타당하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지원액을 저평가하여 제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실거래가의 6%를 임대료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의 토지임대료를 평가한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실거래가의 5%를 적용해 용산 미군기지의 임대료를 최소 15억 달러(1조6972억 원)로 추산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전체(3003만평)에 대해 평가한 임대료 7105억 원보다도 약 1조원이 많은 액수로서 국방부의 토지임대료 평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전국의 실거래가를 알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1994~1998년에 국방부가 적용한 기준인 공시지가의 10%를 적용해 토지임대료를 평가하였다. 그 경우 임대료 평가는 국방부의 7105억 원의 2배인 1조4210억 원이 된다.

둘째, 국방부 집계에는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5만톤)이 누락되어 있다. 토지임대료를 재평가하고 미 육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를 더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액은 6조2906억 원이 된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저평가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미국보다 6배나 많다.

##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미국


지난 5월 24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김경협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미국이 인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처럼 자신들이 지원을 요구한 것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가령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 다른 일체의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 국방부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미 2004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동맹국 공동 방위 부담 통계 해설집」에서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 지원에 직·간접 지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의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주장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구상해왔던 것이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한국이 요구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토지 임대료 평가액이나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의 계산방식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를 최대한 낮추고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알뜰한 술수에 불과하다.

## 국민의 요구와 국익에 부합하게 협상해야

지금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못하고 있다. 8차,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었으므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재 정세 변화 속도를 보면 유효기간은 단기간(2년 이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몇 년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5월 2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 이자소득 환수, 불용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미국 측 입장을 소개(대변)하기에 급급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다. 이에 참석자와 토론 발제자가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를 향해 미국 대표가 아니냐는 항의성 핀잔을 줄 정도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4차 회의까지 보였던 소극적,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 협정 유효기간의 단기간(2년 이내) 설정, 이자소득 환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불법전용 불허 등 우리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 광주



### 5월 26일(토) 5월 월례 선전전을 진행

광주평통사가 월례 선전전을 하는 총장으로 알라딘 서점 앞은 총장로와 금남로 입구입니다. 5월 26일(토)은 광주 평통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광주평통사 9차 정기총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선전전'을 결의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월 9일 평화촛불을 알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핵무기와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외쳤습니다. 5월의 광주는 빈틈없는 일정에 둘러싸여있지만 여러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6월 9일(토) 평화 촛불에 참가

6월 9일 광화문 평화촛불에 광주평통사는 전남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평화촛불인지라, 버스 안에서도 정세를 토론하고 각자 전망을 내어보기도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환히 웃으며 인증샷도 찍고, 광화문을 배경으로 단체사진도 찍고 여느 집회와 달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만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청년모임 회원이 3명이나 참여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추국하는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해 좋았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 서종환 |

## ♡ 군산



### 군산미군기지 되찾기 투쟁 20주년 행사

지난 6월 2일(토) 군산시 옥서면 하계 모정 앞에서 '군산 미군기지 되찾기 투쟁 함께 한 20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아 '군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군산지역 단체회원과 시민, 전주, 익산 등 전북지역 인사들, 제주해군기지 투쟁과 평택미군기지 투쟁하는 동지들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산평통사 평화홀씨의 노래공연을 비롯하여 새로운 투쟁의 결의와 마음을 모으는 문정현 신부, 김연태 전 대표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본행사에 이어 군산기지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는 군산평통사 박운옥 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김판태 대표의 정세연설, 군산기지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는 단체 대표들의 결의 발언이 진행하였습니다.

| 김판태 |

## ♡ 나주

### 나주 평화통일음악회

6월 12일 저녁 7시부터 나주 대호동 수변공원에서 6·15 공동선언 18돌 기념 나주 평화통일음악회가 나주시민들과 나주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월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박하게 추진해 보자고 결의한 평화음악회가 6.15 공동위원회 나주시부 등 많은 단체가 결합하면서 성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새 시대 “판문점 선언 이행! 가자 통일로”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부 6·15공동선언 18돌 기념식은 6·15나주시부 상임대표 김병균(평통사 공동대표) 목사가 여는 말을 하였고, 2부 음악회는 나주평통사 주관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모아 진행됐습니다. 세지중학교 오케스트라, 비단송 통일시 낭송, 멜로디아 통기타 동아리, 국악 송현주, 댄스 나주상고 그린조이, 성악 소프라노 박성경 독창, 나주시립합창단이 평화와 통일을 노래 했습니다.



무대 주변에서는 통일먹거리 통일쌀로 만든 떡과 매실차, 남북정상과 통일인종상, 통일역사바로알기, 보물찾아 한반도퍼즐완성하기 부대행사가 5시부터 시작되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공연 전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행사 전 그쳐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양미화 |

♥ 대구



평통사 대구회원들은 5월 16일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경북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구시

민사회단체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정세에 관련하여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성리 수요집회, 토·일지킴이, 김천 촛불집회, 진밭고 공사인부 출퇴근저지 평화행동, 공부모임도 두박 두박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광화문 평화촛불에도 김천, 성주 주민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 이미경 |

♥ 보령



보령, 논산, 홍성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미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각각 27명, 13명씩 참석한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회 비준동의의 가능성 등 의미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논산에서는 4명이 회원 가입했고 홍성에서는 정기모임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6.9 평화촛불 참석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 권진복 |

♡ 순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6월 15일 오후 7시~9시 순천에서 기념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평통사 주관으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고, 사진전, 포토존, 책 전시, 한반도퍼즐 맞추기, 버튼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제에는 총 9팀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고,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순천 615통일합창단은 '철망앞에서'와 '그날이오면'을 노래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 김용재 |

♡ 부산

평화발자국, 일제하 군사기지 가덕도를 가다

4월 22일 부산교대에서 모여서 승용차를 나눠 타고 가덕도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가덕진성이 있었던 곳. 가덕진(加德鎭)은 조선 시대 가덕도에 왜구 방어를 위해 설치한 수군 첨절제사 진영입니다. 진성 옆 초등학교안에는 척화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양오랑캐가 침범했을때 싸우



지 않는것은 화의를 하자는 것이요, 화의를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가덕도의 천성진성(天城鎭城). 이곳은 부산과 진해 쪽으로 진입하는 바닷길의 요충지로서 예부터 왜구가 침입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후 둘러본 외양포 일방군 포대진지는 1904년 러일 전쟁 직전에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을 지날 때 기습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포대 진지를 설치하여 외양포를 요새화하고자 한 곳입니다.

자갈해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원래 하려 했던 노래 뽐내기와 명상의 시간은 포기하고 가덕도 카페에 가서 오늘 평화발자국에 대한 참가자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덕도에 이렇게 군사기지가 많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앞으로 평화발자국에 계속 참여하고싶다는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발자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대안학교 산티, 온새미학교에서 평화수업

5월 4일과 21일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이 문경 산티학교와 부산 온새미학교에서 평화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내용과 의미, 과제를 짚어본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평화와 통일의 주역으로서 더 많이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운영위원 집중학습 4.20~6.20 진행

평통사 정체성을 확보하여 더 책임있게 부산평통사 활동에 나서기 위한 운영위원 집중학습이 3개월 동안 진

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8~10명이 꾸준히 매 주 진행한 이번 학습에서는 한미동맹, 평화협정, 비핵화, 통일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등 현안에 대한 내용도 짚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6월 30일 수련회를 통해 3개월간의 학습을 총정리하고 조직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 2018 평화홀씨마당 - 7.8 부산 평화촛불

올해 평화홀씨마당 부산행사는 평화촛불로 진행합니다.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북미불가침), 북미수교 동시병행을 주 내용으로 해서 자주통일과 통일염원 2018 평화홀씨마당이 오후 7시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평화홀씨들의 합창과 발언, 영상으로 꾸며집니다. 7.9~27에는 책과아이들에서 평화의 소녀상과 효순미선 관련 작품 전시도 진행됩니다.



### 평화버스타고 6.9 평화촛불 참가

부산 교대역에서 10시 평화버스를 타고 다 같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1주년 평가와 감격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6.12 북미정상 회담 성공을 위한 6.9평화촛불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휴게소에서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지난 번과 달리 교통체증 없이 서울에 도착하여 6.9평화촛불에 함께 했습니다.

부산평화홀씨합창단은 무대에 올라가 철망앞에서 함께 불렀습니다.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외치며 집회하고 행진까지 참여하고 나니 새벽에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 김건우 |

### ♥ 부천

#### 2018 평화발자국 진행!

6월 13일 효순·미선 추모제가 열리는 날, 부천에서는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평화발자국이 있었습니다.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데리고 한꺼번에 진행하려 하니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을 하더라도 참여 인원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 날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평화발자국은 부천에서 현재 유일하게 젊은 청소년을 만나는 고리임에도 사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쪼개 진행하는 만큼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 위한 고민, 일 년에 한두 차례 진행하는 평화발자국을 더 많이 진행하여 학생들을 만나는 고리가 많아지도록 하자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제철밥상

세 차례 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신입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편안한 자리를 통해 주변에 평통사를 알리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주정숙 |

### ♥ 서울

#### 5/2 서울평통사 회원의 날

5월 2일(수), 오후 7시, 광화문 미대사관 근처 KT앞에서



서울평통사 회원의 날로 평화촛불을 들었습니다. 낮부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촛불집회를 할 즈음에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습니다. 처마가 있어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건물 앞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합의와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고, 주제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의 1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15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집회 후에는 함께 뒤풀이도 진행했습니다.

### 강남 향린교회 지지방문

강남 향린교회 강제철거가 자행되어 현장에 천막 기도처가 세워진 것이 6월 21일(목)로 72일째가 되었습니다. 향린 공동체는 물론 연대하는 분들이 지지방문도 오고 24시간 돌아가며 천막 기도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평통사 회원들은 5월 25일(금), 천막 기도처로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 회지읽기 모임

평화누리통일누리 회지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회지에도 정세글을 매달 신고 있습니다. 회지 읽기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환영합니다.(010-5495-6134)

| 황윤미 |

### ♥ 익산

2018년 5월 18일(금) 6시30분 익산평통사 정기총회가 있던 날은 5.18 광주민중항쟁 38주년 이었습니다.



익산평통사도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많은 투쟁들을 진행하며 많은 회원들의 후원과 성원 덕분에 현재의 익산평통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내년 20주년 행사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임원선출]

공동대표 : 문영만 김대송, 운영위원 : 서용 광은경 조원 일 채운석 임수정 유미정, 감사 : 박영천 이해경  
올해는 익산평통사의 조직적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열성회원부터 모아 모임도 하고,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회에서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새로운 익산평통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김대송 |

### ♥ 인천

이번 달 소식은 6월 9일 평화촛불로 가기까지 인천 회원들의 활약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상의 평화(공부모임)는 그동안 학습해 온 내용을 가지







고 도화동성당에서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사회교리의 측면에서 도화동성당 청년들에게 이야기 하며 6.9평화촛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경의선타고' 플래시몹에 참여하자며 학생들에게 6.9 평화촛불 참여를 권유한 운영위원도 있었습니다.



6.9 평화촛불에 인천에서는 40여명 정도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 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진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기는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

| 이우성 |

## ♥ 전주

### 2018 전주평화발자국을 진행한다.

주제 : 평화로 가는 시대에 전쟁의 의미를 묻는다.  
- 전북지역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찾아서



6월 16일 진행한 전주 평화발자국에 총 29명이 참가 했는데, 회원과 시민들의 반응이 대부분 호의적이며 긍정적이었습니다. 해설사와 준비주체의 소통이 원활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역할분담(차량, 자료집, 사전답사, 홍보와 음식준비 등)이 잘 되어 일의 효율성 높았습니다. 그 밖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전강연 때 시민단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당 시민단체와 상호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음.
- \* 중학생들과 청년, 교사들의 참여로 활기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반응도 좋았음.
- \* 현지 주민 증언자 세 분이 연결되어 현장감을 더했고, 의미도 배가 시킬 수 있었음.
- \*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필요성을 개인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음.
- \* 신입회원 2명 가입.
- \* 평통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었음. (전주YMCA 총장의 평 : "평통사는 요즘 예쁜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참가자 소감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다녀와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혼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움직이기가 역시 쉽지는 않네요.. TT  
가능하다 판단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와 통일, 추상적이고 멀기만 하던 단어들이 최근의 이슈들로 인해, 평통사로 인해 성큼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완연하게 푸르르고 맑은 날 의미있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탐방할 수 있어 좋았어요~~♡

늘 배움이 있는 만남 감사해요~~  
000님 덕분에 오늘의 반가운 만남은 따블로!!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또 뵙기를...

| 이재호 |

# 회비와 후원금 (2018년 5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중앙평통사

[대표임원회비] 문홍주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강정구 권정호 배종열 장경호 권정호 강경구 이일영 장경욱 배종열 이천우

[화원회비] 김상균 도진호 박석중 박종권 손정빈 양동일 이현숙 조문자 조민희 황병태 서경숙 이상호 이창우 이규영 유영섭 김점수 유광수 김형배 장성두 김명래 김용순 김동원 김귀옥 김광진 정경춘 이옥숙 권영선 조상수 차진영 변영희 김정희 연천희 이영민 황호영 안진걸 조은숙 김삼열 이영민 홍영진 배현철 김성현

[친조금 및 후원금] 강남교회 들꽃향린교회 성돌향린교회 전주남문교회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이일영 김광열 박유순 고영대 구월(동성당) 부산평통사 이병훈 전나미

## 광양평통사

강동영 강삼영 김금례 김기경 김부필 김용순 김용주 문지일 박수완 박영실 박주식 배민우 서광식 서영만 송호찬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광한 이영기 이정주 이정재 이종재 이희정 정병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천우주 최 열 황미경

## 광주평통사

강경식 강정원 김지연 강종원 고영민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기원주 김경수 김광관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호 김미진 김민경 김민선 김민호 김병중 김삼철 김신미 김성홍 김수영 김 순 김승식 김승중 김영석 김용근 김용목 김용호 김유빈 김은규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점섭 김정은 김지호 김진근 김진환 김태완 김현정 김혜련 김혜선 김효경 김희용 나병철 나윤순 노일경 노진영 류만숙 류승환 명경관 문영숙 문홍석 박광희 박기웅 박상은 박상진 박상희 박석우 박신미 박성수 박시욱 박영도 박옥열 박유순 박재영 박종영 박중주 박종열 박지영 박태순 박홍환 배우용 배진하 백영준 백지은 서경호 서부원 서정숙 서진영 서준환 서현미 서훈희 성창우 손민석 송규만 송미숙 송순교 신경구 신영환 심창남 안 민 안영숙 안재환 양 동 양민철 양승철 양창홍 양혜주 여정은 오봉록 오민주 오승경 오창규 오 훈 오승권 우원복 유영순 유영현 유용열 유종현 윤봉관 윤성호 윤종범 윤지숙 윤현숙 윤형현 이경진 이광철 이교향 이귀일 이규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대환 이매실 이병석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상계 이소형 이수경 이승호 이영주 이영철 이웅대 이윤빈 이윤주 이윤정 이정옥 이철우 이태욱 이현기 이현숙 임광식 임대영 임미이 임세미 임성익 임원태 임종도 장관철 장경도 장덕자 장동식 장애란 장유리 장현규 전경일 전창훈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식 정록호 정성규 정성호 정수진 정순인 정유리 정재호 정종득 정진규 정찬영 정찬성 정형호 정형달 조성식 조용근 조용석 조정하 주진석 주정호 차정문 최경미 최경환 최기호 최영돈 최용호 최은덕 최치현 최형성 표경식 표영민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요한 홍인희 황권태 황세준 황승우 큰사람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군산평통사

강경덕 강인순 강민준 강성식 강혜경 고경자 고동식 고차현 권태군 김경수 김규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철 김미주 김미진 김봉호 김승태 김승근 김승수 김성태 김성준 김수진 김연대 김호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항순 김형균 나시환 남진진 노영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은옥 박원규 박재호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환 서일순 서정호 신진숙 손영선 송상규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양미숙 여승주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허영 이계택 이덕환 이병로 이복희 이병호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운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준희 임유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랑 정 민 정옥진 정창원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호 조용주 조인호 조재용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강민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은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성자 황 진 황현정 조영환 정만영 박유민 장재순 양기만 김 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경호 신유미 이재호 신훈성 현기석 이진우 조수현 오주범 김남기

## 나주평통사

강현욱 김경호 김병규 김성보 김명민 김요섭 박선재 박정연 박철순 소 영 안보현 양이화 양한열 이웅범 이재항 이준호 이현영 장순영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기태 조성환 최진연

##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욱 강형구 고경수 광미경 구자숙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김기연 김기욱 김기웅 김덕기 김도는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미란 김병길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성혜 김수경 김영숙 김진수 김봉희 김진수 김현태 김효남 노영목 노희학 문광덕 문광덕 문혜경 박문수 박민수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중 박재철 박진강 박진삼 박형선 배소라 배영자 배인연 서보성 서수녀 설동현 손만철 신동찬 신호철 안재철 안주연 양은숙 오인태 오창섭 오혜란 우봉진 유소희 유은정 유은영 유창열 윤화일 이근우 이기보 이기자 이대희 이대희 이미경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숙 이석문 이석주 이수인 이수인 이영훈 이우영 이은수 이정연 이종근 이종진 이종준 이준원

이중식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임진우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태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정훈교 조규현 조유연 조현정 주경봉 최봉태 최석인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허재철 한상욱 허정호 허래남 한기영 차상혁 박태희 안현수 김용기 김무영 김윤법 손영준

##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성 김진수 상형규 서훈희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우영 이재문 이정학 이학원 추동신

## 부산평통사

강문수 강경아 계속경 광광덕 광별철 광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임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태 김나영 김남기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김 김용만 김 욱 김유순 김유중 김영미 김영순 김영환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경혜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혜경 김호기 김홍술 김훈구 남승우 남원철 남정철 남태호 도리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윤원 박석문 박성용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 영 박인순 박재에 박정하 박종대 박중순 박진태 박 철 박희동 박영식 서경태 서금성 서기범 서진희 석현진 실정희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중 신승태 신차범 신나영 심창신 안재혁 안종덕 안진숙 양윤영 양진철 양화니 임귀천 여승철 오미주 우수경 원우현 유성일 윤상영 윤재철 윤 현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희 이병호 이상남 이상철 이상정 이상숙 이상영 이의용 이인순 이점숙 이점선 이점숙 이종영 이종숙 이진호 이창환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장호봉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대화 정영선 정봉실 정쌍은 정성희 정현옥 정유희 정의태 정의영 정재양 정혜영 조경주 조병준 조보규조 진병찬 차성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대 최병학 최영희 최용호 최은주 최종태 최진 최형록 하지만 한기양 한석문 황구화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후원) 부산은배매더

## 부천평통사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기수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명준 김용란 김용삼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문은정 문종열 민경선 박석민 박상진 박숙경 박병민 배영미 변승기 사이하 서순복 서해숙 석의정 성영은 손수파 손종욱 송기부 송봉선 신정길 심성희 양남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윤용환 이규환 이병훈 이숙주 이영아 이윤영 이정규 이종주 이준호 이진희 이흥남 임숙영 임현순 장인옥 장혜영 전민미 정근수 정선화 정승욱 정용진 정윤희 정진호 정현희 정희목 조기대 조숙희 주명숙 주영일 주옥련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분 천수향 최성희 최희준 허인영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 서울평통사

강대준 강수해 강양원 강영록 강우균(2개월) 강윤미 강호석 고경심 고광호 고연주 공동길 광원호 구자숙(2개월) 권남근(2개월) 권순길 권순형 권영우 권지세 권혁문 권인희 김각영 김각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규태 김기수 김기수 김동훈 김두신 김영선 김영일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복녀 김성태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성연 김수목 김숙자 김안순 김명도 김명재 김영진 김영진 김형철 김현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재훈 김경미 김경자 김경현 김경철 김중희 김중화 김지수 김진환 김현희 김태준 김태순 김현석 김해성 김홍철 김현진 김희순 김희규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 나혜영 남미경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은숙 류희승 류구호 맹봉학 문봉모 문수정 문인근 문정화 문희경 박덕진 박용수 박봉희(2개월) 박성호 박선진 박성호 박연미 박우석(1년) 박은봉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2개월) 박종인 박진희 박진희 박재철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 배춘실 변연식 서보혁 서영미 서예원 서유미 서은애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 서창식 선소진 선순단 손부한 손수정 장인영 손우정 손윤희 정광진 정김성희 정성현 정순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근모 안봉순 안희옥(2개월)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낙영 오미정 오선환 오지연 오대경 오해경 오혜숙 우문영 우미정 우성란 유영철 유영석 유현주 윤근식 윤동현 윤영일 윤영진 윤은주 윤정원 윤효상 윤종복 이경택 이경아 이경욱 이경희 이경희 이계연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대중 이두우 이병일 이경은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숙 이선희 이상형 이상정 이상수 이상진 이수철 이순희 이수무 이아름 이애롬 이애영 이영 이 윤 이재필 이정삼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지영 이창호 이해경 이해진 박승렬 이화정 이효정 임동원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정희 임진영 임태환 임효일 장남희 장성식 장정우 장진영(2개월) 전성표 정광진 정김성희 정성현 정순연 정영훈 정영민 정준영 정호준 조계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 진유식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최대욱 최문순 최정원 최영환(2개월) 최항숙 한상근 한상기 한성숙 한현실 한호석 허경자 함복순 홍기정 홍영순 홍희성 홍희덕(2개월) 황 안 황윤미 황의대(2개월) 황철우 \* 후원금을 내주시 거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순천평통사

강동구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귀진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명근 김용재 김용태

김유록 김이준 김민철 김경호 김종만 김준희 김하성 김현주 김해숙 김효승 김희숙  
 류보은 문영태 문영훈 문재경 박미옥 박근민 박병석 박상욱 박영주 박종열 박종택  
 박찬형 박태기 박형주 배경섭 배영준 백석인 손승상 송담수 신근홍 신원식 신한휴  
 안병일 양순규 양성영 오옥목 오대현 오하근 유병우 유옥상 윤성근 이거라 이귀엽  
 이규하 이기호 이민재 이상태 이애란 이옥자 이형민 정경호 정성호 정영호 정영동  
 조영식 조중철 조희열 최미나 최희진 한혜영 허남필 홍인식

**안동평등사**

강병철 고정희 권기춘 권순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병삼 김석현  
 김순자 김예숙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철현 김학배 마명락 민현주 박근민 박희환  
 손현모 신광진 신성일 심은혜 여상화 오덕훈 유지홍 이경재 이매우 이성로 이태환  
 이혜선 장세길 정복순 조규현 조병재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조한용 최윤환 강석주  
 김수동 김경석 김경희 김주철 김지섭 김판길 김한택 박무시 박용재 박종구 배용환  
 이창 윤 창 한철희

**익산평등사**

강이현 김대숙 김성덕 김순덕 김양용 김은진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노영래  
 박두식 박영진 박용호 박근경 박지영 박창진 배병욱 백낙진 백선영 서 용 송동한  
 송호진 신귀백 신형우 심경희 안영목 안 준 안현석 오기주 유미정 유재동 유진우  
 이근수 이윤신 임병식 임복순 이석근 이윤신 이은경 이정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혜경 이현숙 이화춘 임탁근 장중순 전미선 전미선 전미영 전호철 정운송  
 정운용 조경권 채진진 채운석 최미애 최영미 최용배 최인경 최재철 최형남 하춘자  
 한상수 허영석 허정길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인천평등사**

강영구 강원희 강한일 고상희 고영남 박준경 권오승 권학식 김갑봉 김금옥 김도율  
 김동진 김두원 김만우 김명중 김미경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 김희경 김봉은  
 김상기 김상경 이주은 김미애 최현호 김성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시란 김영순  
 김오섭 김우경 김윤석 김모준 김은숙 김익근 김옥희 김일중 김일희 김정녀 김정자  
 김경하 김중갑 김중은 김중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현석  
 김현주 김현진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문하나 이은순 박경림  
 박남수 박달수 박영욱 박미정 박순길 박순이 박승문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철  
 박유순 박정숙 박정운 박 진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민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서영수 소병욱 손신재 손정민 손현철 송경택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나영 신용준 신윤래 신희철 심사아 심옥민 심이성 심자섭 안용원 양승조  
 여영숙 오미경 오중춘 오창근 오혁환 오혜영 원 웅 원종민 유근석 유성구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한경 유현섭 윤성우 윤영섭 윤인중 이대준 이덕래 이동현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병철 권오승 이상준 이상천 이상로 이상은 이상희 이숙희 이승천  
 이숙희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지 이은희 이용하 이재숙 이재우  
 이정욱 이정욱 이재학 이종민 이준걸 이창근 이찬지 이춘식 이하선 이하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박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정귀숙 정동훈 정세훈 전혁구 정영락 정미자 정서진 박경진 정승호 오수정 정우성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래 조성태 조용우 조인휘  
 조재호 주용택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리주 최복래 최서일 최순규 최 왕 최 웅  
 최정욱 최정일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추승준 추영호 하경자 한만숙 한상수 한성원  
 한신복 한정수 한현진 한희희 허문애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등사**

오봉숙 나영숙 이종희 국 산 김영호 조미숙 엄경희 임애림 최명숙 이상빈 전형석  
 심 훈 최인규 박수배 한상기 박상만 최재훈 김희찬 전상호 송주성 신귀희 한금수  
 국윤호 원명태 임윤진 하재호 이수원 서 승 김경민 박기순 김성환 정기철 문아경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박동순 조정현 최용기 김진성  
 황재현 채주범 송미영 봉형근 김주진 정기동 이동백 고이석 허만숙 박우성 최금희  
 권동용 장중철 고차원 유영진 이승렬 노재화 정재철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양경자 방용순 이기환 백혜영 최정옥 조경희 이기봉 최영호 민혜경 김재병 심병호  
 김중민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신정순 김태순 배은기 이영식 김광재 이옥희 들꽃교  
 회 김이현 김은자 박우성

**성남용인(준)**

김종국 김준기 김춘식 김표우 노병돈 박종운 서덕석 심재상 심재상 원형석 이순선  
 이용위 정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광철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

**김제 지역 회원**

강용욱 권태정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형기 김형에 김형에  
 나인권 나현규 남궁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영배 박영용 배영술 백창민 백창민  
 스포경 손은하 안진상 오인근 유성룡 유성룡 유재철 이경용 이광만 이우관 이우관  
 이은경 이현숙 이희근 장덕성 전미영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최종일 최종일 하기도  
 하성에 황해정

**대전 충청 지역 회원**

가명환 김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권길성 권현영 김윤수 김경숙 김규원 김기수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상중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지수 김진원 김홍일 김홍수 나백주 노정래 류기영 모성진 오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성호 박병문 박병문 박은호 박인천 박익인 백승희 백영기 변혜숙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성원 신주희 신현용 신현정  
 심규수 심상무 심우근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오광영 오수진 오수철 오승아 오완근  
 오찬실 원용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현 유종철 유진범 유희상 유병민  
 윤상철 윤해경 윤효권 이근용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병규 이세중 이수연 이수연  
 이요한 이우근 이은영 이은정 이재욱 이종영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임병연 임춘근 장도준 장영진 장인범 전양배 전은경 전해련 전해련 정영민 정성현  
 정창식 정태순 정희태 조동준 조만영 조병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재현  
 조주형 최영민 추교화 풍천교회 한상열 함필주 홍지은 황영식

**마창진 지역 회원**

김봉현 김순희 김윤자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금수 신윤혜 여영국 윤종근 이상익  
 이우식 차정민

**목포 영암 지역 회원**

강 신 강경화 강성희 강영태 강일규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기수 김기대  
 김우영 김미순 김민지 김성덕 김서원 김영재 김영희 김용철 김재용 김재용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진수 김창현 김한일 김 현 김현아 김현우 김현진 류규수 마상진  
 문성훈 문매준 박관철 박미숙 박상준 박서근 박 웅 박정화 박중진 박진경 박홍성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서 정 서창호 손낙수 손민원 송원천 송철호 신한중 안광희 양  
 경희 양현주 오승주 유문식 유 종 유지용 유종영 윤영생 이경수 이규인 이병하 이  
 미정 이보라미 이종환 이지용 이치훈 임동용 임순만 장금희 장세원 장우진 전임숙  
 정석기 정성민 정성우 정영록 정지범 정찬길 조기현 조상현 조영규 조영민 최교식  
 최기중 최미애 최진호 최 훈 한봉철 뱀엘교회 산돌교회 중앙교회 용당문교회

**무안 지역 회원**

강성욱 김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철필 김효산  
 모영현 문영란 문유신 박삼석 송봉섭 오해균 윤동주 이도신 이정훈 이태석 임채점  
 정상철 정영란 정중석 정찬록 최병삼 최중률 홍석주 홍용식

**해남 지역 회원**

강장자 강태양 김미희 김병욱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근 김은숙 김정성 나성근  
 노 란 노재식 문형규 민경진 박봉용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배중진 백중수 백형진  
 불문수 서용석 신화국 안소희 안종기 양동욱 양하숙 엄채연 오성재 영영태 오형욱  
 윤예중 윤준서 이우진 이병채 이상규 이원열 이윤명 이정학 이지영 이혜재 임현숙  
 장미호 장우광 전상규 정거석 정경철 정진아 조창익 주단우 최신영 최영수 최은숙  
 한강희

**전남 기타 지역 회원**

강덕구 강복현 곽길성 기숙희 김광수 김광식 김태희 김 문 김선태 김술기 김윤남  
 김현지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대 류춘선 문미경 박경욱 박희희 박용남  
 박용화 박용두 박종재 박태현 방진석 배성환 사민호 서정대 서호철 오태형  
 유원삼 유현숙 유규현 윤미라 이광수 이규열 이기호 이동현 이승현 이형선 장경자  
 장연숙 정영미 정은정 조동근 조효재 채일순 최 성 한창덕

**평택 경기 기타 회원**

강경남 권차량 김교원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주성 김택균 도영호 민선미  
 박성철 서병선 손영인 신종원 연창호 연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상진 이진희 이해준 정인교 조병삼 조재길 차치아윤와라만 최선현  
 최선현 추병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근 한상진 황영선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권일 김경중 김광중 김동원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방은미 양윤호 오영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현식 박수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조현정 강경구 김경호 김영환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계연 이정학 임승계 임종철 홍영진  
 [후원회비] 강문수 강수혜 강윤미 권기식 권순길 권진복 김강연 김규태 김규태  
 김금옥 김대성 김대성 김동진 김미령 김성태 김숙희 김시완 김영석 김영재 김영재  
 김유옥 김일희 김중희 김지영 김판태 김현숙 김홍남 류승화 문규현 민경숙 박병용  
 박복희 박상준 박석분 박성진 박영희 박은옥 서경혜 서준환 손은희 송준우 신재현  
 신재현 심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혜란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지홍 윤희삼 이기훈  
 이대희 이명옥 이미경 이미정 이병준 이석문 이선영 이왕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주는 장남희 정규영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윤정 정향란 조미향 조원용  
 주정숙 하태준 한승동 한혜영 허영석 황윤미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등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희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 351-0995-3651-23 김영석(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승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릉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2237-7822 이재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현택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대전 010-3297-0568 유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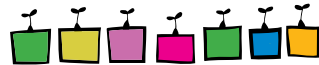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마산창원진해 010-2674-8510 김용환**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욱

**발행일** 2018년 6월 28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